연구논단

중국의 부상과 중-일 간의 파워게임

일본의 시각을 중심으로

장달중

1. 중국의 부상과 충돌로 치닫는 중일관계(?)

중국과 일본은 과연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인가? 2005년 중국의 반일데모와 일본의 민족주의적 반응을 지켜 본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의 하워드 프렌치(Howard French) 기자는 "공허한 레토릭"과 "위험스러운 자기기만의 신화"에 빠져들고 있는 양국관계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지금 일본과 중국은 각기 자신의 신호등만 보고 달리는 열차와 같다는 것이다.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조정 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양국관계는 치명적인 결과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1)]

존스홉킨스대학의 일본전문가인 켄트 캘더(Kent Calder)의 우려는 보다 구조적인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 캘더가 보기에 일본과 중국은 지금 '힘겨루기' 경쟁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파워'(power)와 '두려움'(fear)에 대한 인식의 동요가 전쟁의 원인으로 나타날지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가 걱정하는 이유는 지금 중국과 일본 관계가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유럽의 지역 리더십을 다투던

---

* **지은이** | **장달중**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고, 버클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도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객원연구원을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로 있다. 냉전 이후 세계화 시대의 한·일의 정치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세계화와 전후 정치체제의 변화」(장달중 외 지음, 『세계화와 일본의 구조전환』, 2002), 「정치적 리더쉽과 정치변화 : 비교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정치적 리더십」(장달중·핫도리 다미오 엮음, 『한일 정치 사회의 비교 분석』, 2007), 「세계화와 민족주의 사이의 한일관계 : 상호경시적 흐름에 대한 고찰」(장달중·오코노기 마사오 엮음, 『전후 한일관계의 전개』, 2008), 「냉전 엔드게임과 북미대립」(『한국과 국제정치』 25권 2호, 2009년 여름) 등이 있다.

** 이 연구는 2007년도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학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1) Howard French, "Japan and China Take A Collision Course," *Interantional Herald Tribune*, December 29, 2005.

영국과 독일 관계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2] 프렌치와 마찬가지로 캘더도 중국과 일본이 양국관계의 안정화를 위한 과제들에 진정으로 임하지 않을 경우, 양국 다 같이 대결 노선의 트랩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와 같이 충돌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중일관계에 대한 우려는 프렌치나 캘더와 같은 미국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중국의 부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힘의 전이'(power shift)에 대한 일본인들의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2020년 구매력평가(PPP)를 기준으로 할 때, 중국이 미국과 일본을 능가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작성한 1997년 OECD의 보고서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일본인들의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케 해주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그런 엉터리 연구를 한 OECD로부터 일본은 탈퇴해야 된다"고 흥분한 나머지, 결국 이 연구를 주도한 OECD 개발센터로부터 탈퇴를 감행할 정도였기 때문이다.[3] 일본의 저명한 중국전문가인 모리 가즈코(毛利和子)의 우려는 보다 현실적이다. 그녀는 2005년 4월 중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일 데모로 분명 중일관계는 이제 앞으로 가느냐, 뒤로 가느냐의 커다란 분기점에 다다른 것 같다고 분석하고 있다. 모리는 1972년 국교정상화 이후 50여 년의 세월 동안 확대되는 경제교류에도 불구하고——원인이야 어떻든——취약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양국관계의 현실에 놀라움을 토로하고 있다.[4]

이러한 중일관계에 대한 일본인들의 우려를 반영하듯 아사히신문사가 발행하는 월간잡지 『론자』(論座)는 2005년 3월 '파도 위에 떠 있는 일중관계'라는 특집을 싣고 "아시아를 무대로 21세기의 게임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5] 쓰가미 도시야(津上俊哉)의 지적처럼 이러한 일본인들의 우려는 중국이라고 하는 "대국의

2) Kent Calder, "China and Japan's Simmering Rivalry," *Foreign Affairs*, Mar/Apr, 2006, p. 129.
3) 谷口誠, 『東アジア共同体』, 東京 : 岩波書店, 2004, pp. 71~72.
4) 毛利和子, 『日中関係 : 戦後から新時代へ』, 東京 : 岩波書店, 2006, pp. i ~ vi.
5) 『論座』 2005. 3, pp. 29~93.

흥륭(興隆)"이 일본 국민 대다수에게 몰고 온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6]

2001년경 일본 기업의 중국 이전 붐으로 중국 위협론에 시달렸던 일본은 2003년 불어닥친 중국특수를 즐길 겨를도 없이 중국경제권에 빨려 들어가는 일본 경제의 모습에 당황하기 시작했다. 데라시마 지쓰로(寺島実郎)의 지적처럼 지금까지 미국과의 무역 덕분에 먹고살아 왔던 일본으로서는 갑자기 생업의 무대가 중국으로 바뀌게 된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심리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7] 2000년 3조 엔이었던 일본의 대중국 수출이 2003년 6조 엔에 이르게 되고, 생산지표인 조강(粗鋼)생산이 2005년 일본의 2배인 3억 톤에 달하는가 하면 소비지표인 자동차의 판매대수가 600만 대를 넘어 일본을 능가하게 되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이른바 "처음으로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다"는 일본인들의 느낌이 중국 위협론과 표리관계를 이루며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8]

중국의 부상에 따른 이와 같은 일본의 초조감과 당혹감은 일본의 대중국 '오해'[9]로 점철되었던 과거와는 다른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예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일본의 중국관은 챌머스 존슨(Chalmers Johnson)의 지적처럼 오모네리(阿り ; 아첨하기)와 아나도리(侮り ; 멸시하기)의 패턴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동안 무섭게 성장해 온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두려움은 이제 오모네리와 아나도리의 패턴을 넘어서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투키디데스의 이른바 힘의 전이에 의한 전쟁위험의 지적처럼 중국의 힘과 위협에 대한 일본의 경계심은 부상하는 중국적 질서로의 편입에 대한 두

6) 津上俊哉, 「雁行経済からワィン.ワィン経済へ」, 寺島実郎 外, 『大中華圏』, 東京 : 岩波書店, 2004, pp. 35~40.

7) 「アジアを舞台に21世紀のゲ-イムが 始 まっている」, 『論座』 2005. 3, p. 43.

8) 津上, 「雁行経済からワィン·ワィン経済へ」, p. 35.

9) 岡部達味, 『日中関係の過去と未來』, 東京 : 岩波書店, 2006는 일중관계의 긴장을 오해의 관점에서 파악하려 하고 있지만 작금의 일중관계는 이러한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려움에 다름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메이지유신 이후, 청일전쟁, 전간기(戰間期), 그리고 전후를 거치면서 일본이 리드해 왔던 아시아적 질서가 이제 중국에 의해 주도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지금 일본을 동요시키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일본의 중국 경계심에 분수령을 이룬 것은 2004년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일본의 제1 무역 파트너로 등장하면서부터일 것이다. 미국 덕분에 '밥 먹고 살아왔던' 일본이 이제 중국 덕분에 '밥 먹고 살게 되었다'는 현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놓고 일본의 대중국 인식은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일본은 작금 중일관계 악화의 원인을 중국의 반일적인 애국주의 교육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사실 그 저변에는 캘더의 지적처럼 부상하는 중국의 파워와 그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1894년에서 1972년까지의 일중관계를 연구한 마리우스 잰슨(Marius Jansen)은 중일관계의 가장 아이러니컬한 현상은 국교가 없었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반세기간이 1870년대 이후 가장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시기였다는 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10] 잰슨의 지적처럼 중국과 일본은 역사인식과 영토문제, 그리고 전략적 이해관계의 갭으로 마찰을 피하기 어려운 숙명적 라이벌 관계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의 중일관계가 지금까지 어느 일방의 힘에 의해 규정되었던 이전의 관계와 차원을 달리하는 것은 중국과 일본이 다 같이 자웅을 겨루는 라이벌 파워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11]

사실 탈냉전과 더불어 중국의 부상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부터 중국과 일본은 서로를 파워의 관점에서 라이벌 관계로 보는 구조적 변동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구조적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온 것은 일본이었다. '잃어버린 10년' 동안 일본인들의 뇌리를 짓누른 가장 큰 이슈는 경제적

10) Marius Jansen, *Japan and China : From War to Peace 1894-1972*, Chicago : Rand McNally, 1975, p. 448.
11) Calder, "China and Japan's Simmering Rivalry", p. 129.

침체와 중국의 부상이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인들이 보는 중국은 일본에 새로운 뉴스거리를 제공하는 발전도상국으로서의 중국 정도였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괄목할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매년 두자릿수 국방예산을 늘리고 있는 중국은 더 이상 뉴스거리나 제공하는 발전도상의 나라가 아니었다. '중국뉴스론'을 즐기던 일본은 어느새 '중국 위협론'에 시달리는 자신들을 발견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재일 중국 언론인인 모방푸(莫邦夫)의 지적처럼 동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경합하는 "일중 2강 시대"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12]

2. 근대화 모델과 서열관(序列觀)의 동요

중국의 부상이 일본인들에게 준 가장 큰 충격은 아마도 일본의 '근대화 서열사관(序列史觀)'에 대한 도전이었을 것이다.[13] 일본인들의 뇌리에는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이 중국보다 선진국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아편전쟁 이후의 중국과 메이지유신 이후의 일본은 각기 서로 다른 근대화 전략을 택했지만, 서구화와 자본주의화를 먼저 성공적으로 이룩한 것은 일본이었다. '근대화 모범국' 일본의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우월감과 편견은 바로 이러한 근대화 과정의 산물에 다름 아니었다.

아마도 이러한 일본의 우월감을 무엇보다도 극적으로 나타낸 것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이토 스케유키(伊東祐亨) 제독의 패장 정여창(丁汝昌)에 대한 위로의 말이었을 것이다. 이토는 중국의 패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중국 정부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

12) 莫邦夫, 「日中 二强時代が始まった」, 『論座』 2005. 7, pp. 102~107.
13) 溝口雄三, 「日中関係の虚実—歴史の視座から」, 『寺島外』, pp. 95~99.

았다. 그는 중국이 일본과 같이 구제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머지않아 쇠퇴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여창에게 일본에 같이 가서 근대화의 문물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제의했다.[14] 정여창에 대한 이토의 위로가 암시하듯 이제 일본은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리고 중일전쟁을 거치면서 계속 아시아의 근대화를 리드하는 중심부로 등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근대화의 과정에서 잉태된 일본의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서열관(序列觀)은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일본인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동아시아는 20세기 비서구 세계의 근대화를 리드한 근대화 모델의 경쟁장이었다. 일본이 개혁적 모델에 의한 근대화의 길을 택했다면, 중국은 혁명적 과정을 통하여 근대화의 시련을 극복하려 투쟁했으며, 조선은 식민화의 과정을 통해 근대화의 물결에 휩쓸려 들어갔던 것이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는 20세기 비서구 국가들에게 개혁적 모델과 혁명적 모델 그리고 식민화의 근대화 패턴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델의 경쟁 속에서 먼저 서구화와 자본주의화를 달성한 일본의 성공은 청일전쟁에서의 승리로 나타났다. 청일전쟁은 일본 근대화의 성공을 나타내는 증거에 다름 아니었다. 잰슨의 지적대로 일본의 근대화가 시모노세키(下関)조약을 가능하게 했다면, 중국인들에게 근대화의 필요성을 일깨워 준 것도 다름 아닌 시모노세키 조약이었다.[15] 시모노세키는 이제 세계의 정상으로 여겼던 중국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 일으키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서구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를 불러 왔다. 일본의 대아시아 서열사관이 잉태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일본은 중국을 앞선 일본 정체의 우월성을 교육하기 시작했으며 중국은 이러한 일본의 서열관과 씨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제 아시아의 문명은 중국의 논객들이 아니라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나 오카쿠라 덴신

14) Jansen, *Japan and China*, pp. 9~10.

15) Jansen, *Japan and China*, pp. 3~4.

(岡倉天心), 기타 잇키(北一輝) 등과 같은 일본의 논객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논의의 과정에 선진국 일본과 후진국 중국이라고 하는 서열사관이 점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16]

이러한 근대화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일본의 대아시아 서열의식은 1972년 국교정상화 이후 시작된 이른바 안행형(雁行型) 발전모델의 확산으로 더욱 견고하게 정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잰슨의 지적처럼 국교가 없었던 전후 사반세기 동안 중국과 일본은——그것이 비록 오카베(岡部)가 말하는 "오해의 시작"[17]이 가져다 준 결과였다 할지라도——'관대한 중국인'의 이미지에 의해 형성된 일본인들의 대중 우호감정에 의해 1870년대 이후 가장 긴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1972년 국교정상화와 더불어 상호의존이 깊어지는 과정에서 다시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한 중국의 비난과 일본의 대중국 우월감이 표면화되어 나타나게 된 것은 하나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다.[18]

72년 국교정상화 이후 중일관계가 80년대의 밀월기를 거쳐 90년대까지 안정적인 추이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모리의 지적처럼 어디까지나 중국의 실리적인 개방정책에 대한 '전후 일본외교의 획기적인 결정'인 대중(對中) 경제협력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19] GDP를 4배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 중국의 근대화계획에 일본이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고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주는 국가, 받는 국가'의 서열구도가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후진국 중국에 대한 선진국 일본의 지원이라는 서열구도가 중일관계의 틀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대일무역 적자문제나, 교과서 문제,

16) 溝口, 「日中関係の虚実—歴史の視座から」, p. 99.
17) 岡部, 『日中関係の過去と未来』, pp. 41~43.
18) 岡部, 『日中関係の過去と未来』, p. 448.
19) 毛利, 『日中関係 : 戦後から新時代へ』, pp. 96~97.

나카소네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광화료(光華寮)[20] 등을 둘러싼 끊이지 않는 마찰에도 불구하고 '주는 국가, 받는 국가'라는 구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중국에 대한 경제원조를 확대해 나가는 데 별다른 불안을 느끼지 않았다.[21] 실제 OECD 국가들 중 중국에 가장 많은 공공차관을 제공한 나라는 일본이었다. 1979년부터 1995년까지 중국이 OECD 국가들로부터 받은 전체 공공차관 223억 8백만 달러 중 일본은 전체의 41.91%에 달하는 97억 2천 7백만 달러를 제공했다. 두번째로 많은 차관을 제공한 독일은 22억 8천 9백만 달러로 9.86%였으며 미국은 2천 3백만 달러로 0.23%에 불과했다.[22] 이로써 1979년 시작된 일본의 대중 엔 차관은 2003년까지 총 3조 엔을 넘어서게 되었다.

모리의 지적대로 이러한 '주는 국가, 받는 국가'의 기본구도는 1989년 천안문 사태나 1995년 중국의 핵실험 등에도 불구하고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천안문 사태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비난은 매우 강도가 높았지만 일본은 달랐다. 일본정부는 천안문 사태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비난보다는 사태의 빠른 진정을 바라고 있었다. 일본은 '정부통일견해'를 통하여 "일중관계는 구미제국과 비교하여 역사적·문화적으로 매우 깊은 관계이며", 이 때문에 경제협력 등 지금까지의 기본방침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나섰던 것이다.[23] 뿐만 아니라 1995년 두 번에 걸친 중국의 지하 핵실험으로 중국에 대한 일본의 경계심이 등장하는가 하면, 향후 1년 반 동안 무상원조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하기는 했지만 '주는 국가, 받는 국가'의 기본구도에는 큰 변화가 없는 듯 보였다. 왜냐하면 1996년 10월 중국이

20) '광화료'는 교토의 중국 유학생 기숙사로 전후 대만이 매입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1967년 대만이 이 건물에 있던 친중국 유학생 8명의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유명해졌다. 1987년 당시 오사카 고등법원이 대만의 승소판결을 내리면서 중국과 마찰이 빚어졌으나, 2007년 일본 대법원이 중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있는 1977년 일중 공동성명을 근거로 대만의 원고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을 내리면서 일단락되었다.

21) 毛利, 『日中関係 : 戦後から新時代へ』, p. 97.

22) 林暁光, 『日本政府開發援助与中日関係』, pp. 381~382. 毛利, 『日中関係 : 戦後から新時代へ』, p. 115에서 재인용.

23) 『読売新聞』 1989. 6. 24.

CTBT에 조인, 핵실험의 중단을 발표하자 일본은 1997년부터 대중 무상원조를 재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조하는 국가, 받는 국가'의 기본구도는 일본경제의 침체와 중국경제의 괄목할 만한 성장이 일본인들의 피부에 와 닿기 시작한 2000년을 전후해 흔들리기 시작했다. 신흥대국 중국의 대두에 대한 일본 매스미디어의 '중국 위협론'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이지만, 약진하는 중국경제의 파장이 일본인들의 피부에 와 닿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2000년을 전후해서인 듯하다. 1979년 2,153억 달러에 불과했던 중국의 GDP가 1990년에 3,888억 달러로 증대되고 2000년에는 1조 71억 달러로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하자[24]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개발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던 대중 원조정책을 군사적 전용의 방지, 민주화, 시장화, 인권보장 등을 조건으로 한 원조정책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중국의 대두는 이제 '주는 국가, 받는 국가'로 서열화되어 있었던 중일관계의 기본구도에 변화를 몰고 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실제로 1992년부터 2003년 사이 중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이었던 일본은 2004년 EU와 미국에 이어 제3의 교역상대국으로 전락했다. 뿐만 아니라 2004년 중국의 교역량은 미국, 독일에 이어 제3위에 이르러 1조 2천억 달러였던 데 반해 일본의 교역량은 1조 7백억 달러에 머물렀다. 이러한 중국경제의 팽창에 대해 일본이 '중국경제 위협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한 것은 일본기업들이 줄지어 중국에 공장을 이전하기 시작한 2001년경부터였다.[25] 쓰가미의 지적처럼 중국 위협론이 마치 패닉상태에 빠진 것처럼 일본에 거세게 일어났던 것은 다름 아닌 일본이 처음으로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다'(抜かれる)는 느낌과 표리관계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26]

---

24) 中国国家統計局, 天兒 慧, 『中国とどう付き合うか』, 東京 : 日本放送出版協会, 2003, pp. 96~97에서 재인용.

25) 津上, 「雁行経済からワィン.ワィン経済へ」, p. 35.

26) 津上, 「雁行経済からワィン.ワィン経済へ」, p. 35.

하지만 2003년 '중국특수'가 '퍼덕거리던'(sputtering) 일본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게 되자 일본인들의 심리적 동요는 좀더 복잡하게 나타났다. 이제 경제적 '운명공동체'로서의 중국관과 '위협적인 반일 제국'으로서의 중국관이 중첩되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것은 일본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힘(power)과 두려움(fear)에 대한 인식으로 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중국의 부상이 일본의 심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쓰가미의 주장은 매우 흥미롭다.[27] 그가 주장하듯이 비서구 국가 중 유일하게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은 이후——안행(雁行) 경제[28]라고 하는 개념이 암시하고 있듯이——한국과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의 신흥 공업국들이 추진한 근대화 노선의 모델이 되었다. 이들 신흥 공업국들은 일본의 모델에 따라 '따라잡기'(catch-up)를 계속하며 근대화에 성공을 거두었지만, 아직 일본을 추월하기에는 거리가 있어 보였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성장은 이들 신흥 공업국들의 추월과는 차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후발주자(late-comer)로서 서구국가들을 따라 잡는 데(catch-up)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추월하는 데(surpass)도 성공한 일본이지만, 후-후발 주자(late- late comer)인 중국에 의해 자신이 추월당할지도 모른다는 현실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심리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은 한국이나 대만과 같이 안행형 경제노선을 택한 후-후발주자들의 성장이 가져다 준 혜택을 어느 정도 누리고 있었지만 추월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규모가 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중국이라고 하는 '대국의 흥륭'이 일본에 미친 영향은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중국의 성장으로부터 일본이 혜택을 누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 의해 추월당할지도 모른다는 현실의 등장이었다. 이러한 현실은 일본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여유롭게 중국을 대할 수 있게

27) 津上, 「雁行経済からワィン.ワィン経済へ」, pp. 35~37.

28) '안행 경제'는 기러기가 V자 형태로 대열을 유지하며 날아가는 것에서 착안한 개념으로, 선발 산업국가의 산업수준이 해당 지역 후발 국가들의 발전을 추동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준 기존의 서열관에 변화를 몰고 오기 시작했다. 일본경제의 장래를 결정짓는 최대의 인자는 다름 아닌 중국경제의 앞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중국경제가 재채기를 하면 일본경제는 감기에 걸린다"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표현들이 일본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했다.[29]

'좋든 나쁘든' 그리고 '역풍이 불더라도' 일본경제가 중국에 경사(傾斜)되는 흐름을 막기는 어려워졌다. 뿐만 아니라 중국 없이 일본경제가 불황에서 탈출하는 것도 상상조차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중국경제에 대해 느끼기 시작한 인식은 이중적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중국을 운명공동체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경제적 현실 속에서 후발 중국에 추월당할지도 모른다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심리적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교역액 면에서 EU와 미국에 이어 3위로 밀려나게 되자 지금과 같은 '정냉경열'(政冷經熱)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일본만이 중국시장에서 고립화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30]

아마도 중국이 "일본경제의 구세주인가 아니면 반일의 거인인가"를 놓고 벌인 2004년 12월 『분게이슌주』(文藝春秋)의 좌담 「대회의·중국폭발」(大会議·中国爆發)은 바로 이런 일본의 동요를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하나의 증거일지도 모른다.[31]

3. 평화적 대두(平和的 擡頭)와 파워게임

중국의 부상은 위협인가 아니면 기회인가? 일본은 지금 중국과 매우 불편한 탱고를 추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으로 보면 중국과의 파트너십이 필요 불가결하지만, 다

29) 津上, 「雁行経済からウィン.ウィン経済へ」, pp. 35~36.
30) 『文藝春秋』 2004. 12, p. 108.
31) 津上, 「雁行経済からウィン.ウィン経済へ」, pp. 104~125.

른 한편으로 보면 중국과의 라이벌 관계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파트너와 라이벌 사이를 오가는 중국과의 탱고를 어떻게 출 것인가? 일본은 지금 이 문제를 놓고 동요하고 있다.

이미 앞에서 지적하였다시피 경제적으로 볼 때 일본은 중국을 파트너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중국특수'로 경제적 혜택을 누린 일본으로서는 중국경제와 일체화되어 가고 있는 일본경제의 현실 속에서 중국과의 '사실상의 경제통합'[32]에 대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제 미국을 대신하여 일본 최대의 수입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3년 일본 수출신장의 70%는 대중 수출에 힘입은 것이 될 정도로 일종의 '경제적 운명공동체' 관계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33] 쓰가미의 지적처럼 중국경제 위협론이 불어닥쳤던 2001년경만 해도 중국과의 FTA 체결문제는 거론조차 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하지만 2003년 중국특수로 FTA 체결과 상관없이 이미 '사실상의 통합의 길'에 들어서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경제현실을 일본의 재계는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재계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나가다초(永田町)와 가스미가세키(霞ヶ関)의 정치적 움직임은 부상하는 중국을 파트너라기보다는 라이벌로 받아들이려는 경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정냉경열'의 표현이 상징하듯 경제적 공생관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대중국 불신은 깊어만 가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 문제나 대만 문제, 영해, 영토, 안전보장, 경제마찰 등 제반 문제가 중일관계에 새로이 나타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파트너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점점 더 경쟁적인 라이벌의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본은 경제면에서 파트너화되고 있으나 정치면에서는 라이벌화되고 있는 중국과 불안한

32) 津上, 「雁行経済からワィン.ワィン経済へ」, pp. 37~38.
33) 朱建榮, 「西安·反日デモが象徴する日中の過渡期」, 『論座』, 2004. 2, pp. 230~231.

탱고를 추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일본과 중국의 어색하고 불안한 탱고는 동아시아 세력판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두 강대국이 어떤 의도로 행동할지를 가늠하게 하는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의심의 여지없이 지금 일본과 중국은 갈등적인 '현실주의 파워 폴리틱스'(realist power politics)의 관점에서 서로를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에 걸려 있는 스테이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서로는 서로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어색하지만 불안한 탱고를 추고 있는 것이다.

역사 문제나 대만 문제, 그리고 미일동맹 문제 등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문제들이 현실주의적 파워 폴리틱스의 관점에서 새롭게 중일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2004년부터 중일 간에 새로운 마찰의 불씨를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는 아마도 에너지 자원의 확보를 둘러싼 파워게임일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에너지 확보는 중국과 일본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고려사항이다. 따라서 에너지의 9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과 4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 간의 에너지 자원 확보 경쟁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제는 이 에너지 확보 경쟁이 아시아에 새로운 안보 딜레마를 생성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34] 중국과 일본이 파워게임을 벌이고 있는 에너지 문제는, 동지나해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중간경계선 주변의 중국 측 해역에서 일어난 춘시아오(春曉) 가스유전 개발 문제와 러시아의 동시베리아에서 극동으로 이어지는 석유파이프라인건설을 둘러싼 송유관루트 경합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경쟁이 문제의 본질과 동떨어진 파워게임이었다는 사실이다. 춘시아오에서 정말 가스가 나올 것인가, 또 동시베리아 파이프라인의 출구를 중국의 다칭(大慶)에 하지 않고 일본이 요구한 대로 나호트카에 할 경우 일본의 독점적 사용이 가능할 것인가 등 본질적 문제에 대한 논의는 제쳐 둔 채 정치적

34) Calder, "China and Japan's Simmering Rivalry", pp. 129~130.

긴장만 고조시켰던 것이다.[35] 일본의 산업경제장관인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는 2004년 6월 23일 춘시아오 가스전 상공을 비행하고 중국의 공동개발 제안에 대해 "현시점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보수 언론의 반대를 부추겼는가 하면, 『산케이신문』(産経新聞)은 2004년 10월 24일자 사설 「가스전 문제에 강력한 자세로 중국에 대응해야」(ガス田問題強い姿勢で中国に當たれ)에서 가스전 문제를 중국의 군사력이나 일본의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관시키야 한다는 공격적 입장을 취하고 나왔던 것이다.[36] 중국의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이 오키나와 근해의 일본 영해를 침범한 사건이 일어난 것은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11월이었다.

에너지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두 나라의 경쟁을 보면 두 나라 간에는 파워에 대한 욕망 말고는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인다. 어느 중국학자는 이러한 중·일·러, 혹은 중·일·미의 대립을──중국 속담에──두 개밖에 없는 복숭아를 놓고 세 명의 무사가 다투다가 서로를 죽이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과 유사하다고 염려하고 있다.[37] 실제로 중일 간의 불신은 파워경쟁에서의 우위 확보를 위한 동맹 구축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나서는 반면, 중국은 상하이 협력기구(SCO)를 통해 이에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은 서로를 억제하거나, 또는 제3국에 의해 억제되기에는 너무나 큰 나라들이다. 따라서 에너지 안보를 위한 경쟁으로 서로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는 형편이다. 어색하지만 불안한 탱고를 추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일본과 중국의 파워게임은 이른바 4개의 T(Textbook, Territory, Taiwan, TMD ; 전역미사일 방어망)를 중심으로 여러 수준에서 전개되고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우면서도 우려할 만한 것은 아마도 이미지와 위상(status)을 둘러싼 신

35) 陳言, 「石油やガスを奪い合っても何もならない」, 『論座』, 2005. 3, pp. 69~70.
36) 陳言, 「石油やガスを奪い合っても何もならない」, pp. 71~72.
37) 「シンポジウム : 中日関係の再構築に向けて」, 『論座』 2005. 5, p. 176.

경전일 것이다. 2007년 12월 27일 중국은 다섯번째로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하여 '중국의 부상'이 어느 나라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일본의 외상인 아소 타로(麻生太郎)는 일본외교의 심각한 방향전환을 예고하는 "중국은 상당히 위협적인 나라"라는 발언으로 응수하고 나섰다. 프렌치의 지적처럼 여기서 문제는 과연 이 두 강대국의 충돌로 이어지는 파워의 절연체를 만들어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서로의 이미지와 위상을 둘러싼 신경전을 보면 이러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왜냐하면 "중국의 발전은 일본의 발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중국의 입장은 일본과 수뇌회담을 포함한 정상적인 관계를 수립할 때까지 결코 일본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문제가 있을수록 수뇌회담은 열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도 "동일한 역사인식을 갖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는 일본의 입장 역시 중국을 설득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38]

아마도 일본이 중국에 대해 불신과 불안을 단적으로 드러낸 에피소드는, 2006년 10월 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이 전격 방중했을 때 환영연회의 메뉴와 숙소를 둘러싼 중국과의 신경전일 것이다. 『아사히신문』(朝日新聞) 가토 지히로(加藤千洋) 기자의 「제비집과 해삼 그리고 12루, 아베 총리 방중습유기(訪中拾遺記)」는 예우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신경전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39] 가토 기자가 전하는 내용을 보면 일본의 대중(對中) 신경전이 어느 정도인가 짐작케 한다.

> 10월 8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회담을 마친 아베 수상은 인민대회당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수상 주최의 환영만찬에 참석했다. 메뉴는 비교적 간단한 것이었지만 중국이 연회에서 최고 격으로 치는 수프인 제비집 수프가 제공되었다. ……

38) French, "Japan and China Take A Collision Course,".
39) 『朝日新聞』 2006.11. 30.

> 중국이 연회에서 가장 중시하는 메뉴로는 제비집 수프가 최고급이며, 그 다음에 샥스핀 수프, 해삼 수프 순으로 격이 정해져 있다는 설이다. 이러한 격에 따르면 (일본의 아베 수상은) 최고급 수준에서 환영을 받은 셈이다. 하지만 당초 중국이 준비한 메뉴 안은 '해삼두부' 수프였다는 것이다. 이것을 안 일본 측이 메뉴의 변경을 요청해 와 결국 해삼두부 수프 대신 제비집 수프가 만찬 테이블에 올려지게 되었다는 것이 중국 측의 설명이었다. …… 일본 측은 '상대방에 만찬 메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외교예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지만, 관저 주변에서는 '제일 격이 높은 수프로 대접받아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 같다.

격식을 둘러싼 신경전은 수프에만 한정되지 않았던 것같이 보인다. 댜오위타이(釣魚台) 국빈관의 숙소를 둘러싸고도 양국은 신경을 날카롭게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국빈관의 숙소에도 격식이 있는데, 최고급은 18루(樓)지만 개수 중이기 때문에 아베 수상은 다음 급인 12루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의 방중 때는 제비집 수프를 대접하고 18루를 숙소로 제공하면서 일본 수상에게는 12루를 숙소로 제공하며 해삼두부 수프를 굳이 만찬 메뉴에 올린 중국이나, 초청국가의 연회 메뉴를 최고급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해야만 했던 일본을 보면 메뉴를 둘러싼 두 나라 간의 신경전은 단순한 외교적 의례의 차원을 넘어 잠재된 라이벌 의식이 표출된 것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러한 에피소드는 벤자민 셀프(Benjamin Self)가 말하는 표면적 우호 속에 깊어지는 양국 간의 경쟁관계를 암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셀프의 지적처럼 중일관계에 긴장을 초래하는 이슈들은 결코 새로운 것들이 아니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동일한 이슈들이 새로운 각도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40] 일본인들의 눈에는

40) 小島朋之, 「3層構造から理解する新たな日中関係」, 『論座』 2005. 8, pp. 30~31.

중국이 역사 문제를 계속 들고 나오는 것은 중국인들 앞에 일본인들이 머리를 숙이도록 하여 메이지 이후 일본이 중국에 대해 지니고 있던 기존의 서열관을 전복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 따라서 역사 문제에 대한 인식논쟁은 이미 '옳고 그름'의 가치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이익과 민족감정의 파워게임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일본 지도자들은 중국을 이해하며 우호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과거의 지도자들과 달리 중국에 맞대응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72년 체제와 78년 체제에 의해 유지되었던 우호관계의 원칙과 문제 해결 메커니즘은 붕괴의 위험에 처해 있다. 겉으로 보기에 역사 문제가 중일 양국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 역시 가치판단의 차원을 넘어선 파워경쟁의 한 단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셀프는 이러한 현상을 세대교체에서 오는 역사인식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지역적 리더십 경쟁에서 부상하는 중국에 비해 침체의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불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다름 아니라고 보고 있다.[41]

물론 중국에 대한 일본의 라이벌 의식은 역사적 맥락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은 여전히 일본의 보통국가(normal state)화에 의심을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중화주의에의 복귀를 모색하고 있는 '부상하는 국가'이다. 따라서 일본의 눈에 비친 중국은 힘의 경쟁과 힘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현실정치'(realpolitik)의 국가이다.[42]

여기에 일본이 근대화 이후 유지해 온──아직 불식하지 못하고 있는──서열의식이 '불공정한 중국', '중국경제는 위협'이라는 인식을 가중시키고 있다. 2004년

41) Benjamin Self, "China and Japan : A Facade of Friendship", *The Washington Quaterly*, Winter 2002~03, pp. 77~88.

42) Wu Xinbo, "The Security Dimension of Sino-Japanese Relations : Warily Watching One Another", *Asian Survey*, Mar-Apr., 2000, p. 297.

일본 내각부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중국에 호감을 지니고 있다"는 일본인은 37.6%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조사가 시작한 이후 최저로 나타났다. 비록 중국과의 경제관계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고는 해도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중국악자론'(中國惡者論)이 아직 일본인들의 대중국 서열의식의 근저에 깔려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 내의 범죄 중 97% 이상이 일본인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중국인들이 범죄의 온상인 것처럼 다루고 있는 일본 언론의 보도는 일본인들이 중국에 대해 지니고 있는 편향된 의식의 반영일 뿐이다. 따라서 일본의 경제침체를 중국의 탓으로 돌리려는 일부 매스미디어의 행태는 마치 1970년대와 80년대 미국 경제침체의 원인을 일본 탓으로 돌리던 미국의 행태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지도 모른다.[43]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현상을 다름 아닌 '추격하는 국가'에 대한 '추격당하는 국가'의 감정적 비판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상하는 중국이 일본에 주는 충격이 예전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이제 일본의 대중국 정책은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과 벤자민 셀프가 말한 1970, 80년대의 상업적 자유주의(commercial liberalism)에서 90년대의 '본의 아닌 현실주의'(reluctant realism)[44]를 거쳐 이제 본격적으로 아시아 패권을 겨루는 2강 시대의 '현실정치'(realpolitik)의 정책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이벌화에 의한 중일관계의 악화 원인을 중국은 일본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 등 역사인식에 돌리고 있는 반면, 일본은 장쩌민(江澤民) 주석 시대에 시작한 반일 애국주의 교육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중일관계의 라이벌화는 구조적 전환이 시작된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45]

---

43) Wu Xinbo, "The Security Dimension of Sino-Japanese Relations", p. 231.

44) Michael Green and Benjamin Self, "Japan's Changing China Policy : From Commercial Liberalism to Reluctant Realism", *Survival*, Summer 1996. Wu Xinbo, "The Security Dimension of Sino-Japanese Relations", p. 297에서 재인용.

국제정치적인 파워 이전(移轉)의 관점에서 보면, 90년대 중반부터 중국의 부상으로 상징되는 권력이전 현상은 일본의 대중국 정책에 결정적인 변화를 초래하기 시작했다. 중국 위협론이 일본 매스미디어를 장식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1995년을 전후한 시기였다.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통한 중국 봉쇄전략이 대응책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때부터였다.

모리에 의하면 중일관계에 구조적 전환을 제공한 결정적인 계기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보고서 채택과 뒤이은 중국의 대만해협에서의 미사일 발사 및 합동군사훈련이었다.[46] 실제로 1996년 대만해협 위기는 일본에 중국 위협론을 확대재생산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일동맹 문제가 중일 간의 가장 큰 이슈로 등장하는 전환점을 제공했던 것이다.[47]

냉전 후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 정립된 것은 1995년 2월 '나이 리포트'(Nye Report)로 알려진 '동아시아 전략보고'를 통해서였다. 나이 리포트는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삭감을 중단하고 10만 병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부상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미일안보의 재편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일본도 소련 붕괴 후의 아시아 태평양 방위전략을 위해 19년 만에 대폭 수정된 '신방위대강'을 내놓았다. 이러한 미일 간의 동아시아 전략 수정이 진행되고 있을 때 대만의 독립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이 행한 1996년 3월의 미사일 연습과 3군 합동 군사연습은 미일 간에 '안보 재정의'를 촉발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다. 미국과 일본의 대응은 4월 클린턴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미일 안보조약을 재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주변사태"에서의 미일안보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미일공동선언의 채택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이러한 미일안보협력을 일본의 군사적 역할 증대에 다름 아니라고 비난하는 동시에 '주변사태'에 대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확인을 요구했지만, 1997년 8월 가지야마 세

45) 『日本経済新聞』 2006年 10月 8日, 社說.
46) 毛利, 『日中関係 : 戦後から新時代へ』, pp.136-140.
47) 毛利, 『日中関係 : 戦後から新時代へ』, p. 140.

이로쿠 관방장관은 "주변사태의 지리적 개념에 대만이 포함된다"는 정부 공식견해를 발표하고 나섰던 것이다.[48]

미국의 의도는 일본을 '극동의 영국'으로 만들어 중국과 세력균형을 도모하는 '역외균형'(off-shore balancing)을 택하는 것이었다. 미국에서는 "미영 간의 특수관계가 미일동맹의 모델"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일본도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저항하지 않았다. 이것은 지금까지 일본이 택해 온 전후 외교안보 정책의 전환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일본은 1952년 독립을 획득한 이래 평화적인 외교정책을 기조로 공격적인 군사력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세계적인 군사전략에 참여하는 것도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존슨은 일본의 정책전환을 "눈에 띄지 않는 점진적인 재무장"(stealth program of incremental rearmament) 움직임으로 특징짓고 있다. 그는 재무장 움직임이 1990년대 이후 제정된 21개의 안보관련 법안과 2004년의 9개 법안 제정이나,[49] 국방예산의 증액, 해외파병의 정당화, 미사일 방어망에의 참가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특히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의 등장과 부시 행정부의 군사우선 정책은 이런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대중국 탱고가 어려워진 것은 중국의 '평화대두'[和平崛起]론과 중국 특수에 의한 일본경제의 부활이 시기적으로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과 결코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2003년 말 하이난섬 보아오에서 중국의 평화대두론을 처음 제기한 정비젠(鄭必堅, 당시 중앙당교 부교장)은 2050년에나 가능할 중국의 근대화 실현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대국의 부상에서 발생하는 국제관계의 패턴에서 벗어나 평화, 발전, 세계 모든 국가와의 협조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하고 나섰다. 중국은 제1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시기의 독일의 대두, 혹은 자원의 약탈을 통

48) 毛利, 『日中関係 : 戦後から新時代へ』, p. 139.

49) Chalmers Johnson, "No Longer the 'Lone' Superpower : Coming to Terms with China," *Memeo*, pp. 5~6.

하여 패권을 모색했던 전간기의 일본과 독일의 대두와 같은 패턴, 그리고 냉전기의 세계적 지배를 획책했던 초강대국의 대두 패턴을 탈피하기 위해 중국은 이데올로기의 차이를 극복하는 노선을 택할 것임을 밝혔다.[50]

하지만 중국특수에 의한 일본경제의 부활을 보며 일본은 중국이 내건 평화대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리버럴한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의 논설위원인 후나바시 요이치(船橋洋一)조차 중국의 부상을 전후 일본의 부상을 상회하는 역사적인 흐름으로 보고 국제정치의 권력 이전에서 발생하는 국제질서의 변화를 불러올 위험이 있다고 걱정스러운 진단을 하고 나섰다. 그는 중국의 평화대두는 중국 위협론을 봉쇄하여 중국의 대국외교를 준비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이라고 보고 이 과정에서 일본이 고립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51] 이러한 불안은 보수 논객인 나카니시 데루마사(中西輝政)에 의해 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중국의 평화대두론은 어디까지나 중국이 여유가 있을 때 내놓는 중화문명의 우월성 과시에 불과하며 사태가 나빠지면 언제든지 피해망상적 배타주의로 돌변할 경계의 대상이라는 것이다.[52] 또 다른 보수 논객인 오카자키 히사히코(岡岐久彦)는 중국의 국력 증대에 외교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독일의 부상에 프랑스·러시아와의 동맹으로 대항했으나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했던 영국의 아픈 과거를 답습할지 모른다고 경고하고 나섰다.[53]

사실 지금 일본에서는 중국의 국력 증대를 19세기 독일의 부상에 비유하는 논조가 팽배해지고 있다. 이러한 논조는 보수 진보를 가릴 것 없이 일어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일본은 지금 중국특수로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는 있지만, 독일의 부

---

50) Zheng Bijian, "China's Peaceful Rise to Great Power Status," *Foreign Affairs*, Aug-Sep-Oct., 2005. 일본어 번역판 鄭必堅, 「平和的撞頭への道筋」, 『論座』, 2005. 10, pp. 262~63.

51) 「中国平和撞頭論」, 『朝日新聞』 2003. 11. 27, p. 13.

52) 『文藝春秋』 2004. 12, pp. 108, 122~23.

53) 岡岐久焉, 『この国を守るための外交戦略』, PHP新書, 2007, pp. 33~34.

상이 유럽의 판도를 흔들어 놓았듯이 중국의 부상이 동아시아의 세력판도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일본이 중국의 부상에서 느끼고 있는 불안은 미국 주도의 현존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룰과 제도에 대한 중국의 도전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54] 왜냐하면 일본은 중국의 부상을 동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파워의 전이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중국이 이러한 파워의 전이를 통하여 지금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누리고 있는 패권적 지위를 대체할 가능성을 두려워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개혁개방을 도와 동아시아의 발전과 평화를 유지하고자 했던 지금까지의 일본의 대중국 정책은 더 이상 일본의 전략이익에 맞지 않게 되었다고 판단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본은 경제적인 중국특수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관계를 초월한 전략적 대응책을 어떻게 모색할지를 놓고 방황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아마도 이런 일본의 입장을 가장 분명히 드러낸 것은 중국을 처음으로 일본의 안보 대상에 포함시킨 2004년 12월의 '신방위대강'일 것이다. 안보위협으로서의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신방위대강'의 조치는 미일 군사동맹 강화와 자위대 체제 개편은 물론 해외파병과 유사시에 대비한 '유사법안' 제정 등으로 나타났다. 중국을 미일의 공동 전략대상으로 삼은 2005년 2월 '2+2'회의는 신방위대강과 표리관계를 이루며 나타났다. 2005년 2월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의 국무장관·국방장관과 일본의 외무대신·방위청장관 간의 이른바 '2+2'회의는 '중국의 군사력 근대화와 대만 문제'가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전략대상이라고 분명히 밝혔던 것이다.[55] 대만해협 문제에 대한 일본의 간섭 권리를 천명한 이 회의는 일본이 전후 60여 년 동안 유지해 왔던 평화주의 외교의 종언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사쿠라다 준(櫻田淳)의 지적대로 중국 위협론을 이용하여 야스쿠니 문제에 타

54) 중국의 대두가 서구질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G. John Ikenberry, "The Rise of China and the Future of the West," *Foreign Affairs*, 87, 2008. 일본어판「中国の擡頭と歐美秩序の將來」,『論座』, 2008. 2, pp. 269~280을 참조.

55) 毛利,『日中関係：戦後から新時代へ』, pp. 199~200.

협하지 않고 미일동맹 강화에 매진한 고이즈미 외교는 프랑스의 고립화를 통해 제국의 안전을 도모했던 비스마르크의 수법과 유사한 것이었다. 비스마르크가 프랑스를 저당잡아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와 관계를 구축하고 이것을 제국 안전의 기본선으로 삼았던 것과 같이 고이즈미는 중국을 저당잡아 부시-고이즈미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일본의 대중국 견제능력을 확대하고자 했던 것이다.[56] 이러한 미일안보동맹의 강화를 통한 일본의 대중 견제 움직임은 아베, 아소로 이어지는 일본정부의 국가주의와 민주주의 연대, 가치외교 구상에 의해 더욱 강화되어 나타났다.

4. 미중일 관계 속의 중일관계

경제와 정치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어색한 탱고는 중국의 부상이 몰고 올 미중일 관계의 변화에 의해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중국의 부상으로 '절대화되어 있던' 미일 관계가 '상대화'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파워와 영향력 증대는 곧 바로 미국의 대일정책에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부상이 이미 중일 양국관계의 차원을 넘어선 미중일 간의 문제로 변화하고 있는 데 일본은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우려가 파라노이드(Paranoid)의 산물이라는 주장도 없지 않다.[57] 왜냐하면 일본과 미국의 정책 당국자들이 중국의 부상을 동아시아의 세력균형을 동요시킬 중요한 문제로 다 같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의 부상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공동 대응전략을 천명하고 나섰다. 오키나와 미군 주둔을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a

56) 櫻田淳, 「対中関係という'抵當'は」, 『論座』, 2006. 10, pp. 48~49.

57) 중국의 군사적 지배의 위협이 과장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Jonathan Power, "The so-called rise of China,"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05. 4).

Rice) 미국무장관의 발언이나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일본과 미국이 당면한 공동의 전략문제임을 천명한 2005년의 '2+2'회의 등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은 이미 미일관계에 무시하기 어려운 파장을 몰고 있다.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는 그의 저서 『디플로머시』(*Diplomacy*)에서 중국과 일본은 가까운 장래에 군사력을 증강시켜 동아시아의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그는 이러한 지역적 불안정을 막기 위하여 미국의 지속적인 군사적 주둔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미일의 협조, 혹은 일본에 대한 미중의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58]

역사적으로 동아시아의 평화나 전쟁이 미중일 3국 관계에 의해 좌우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리에 아키라(入江昭)는 이러한 3국 간의 균형이라고 하는 도식을 오늘의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투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3국 간의 세력관계가 동아시아의 질서를 규정해 온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59] 그가 주장하듯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중국대륙에 대한 지배를 시도하자 미국은 중국에 대한 근대화 지원으로 일본을 견제하고 나섰으며, 3~40년대에는 일본이 이른바 대동아 공영권 구상에 의해 중국대륙 침략을 감행하자 전쟁으로 맞섰다.

뿐만 아니라 1949년 중국의 공산화로 1950년 중소동맹이 결성되자 미국은 일본과 안전보장을 체결하여 중소동맹에 대항했으며, 60년대 말 중소갈등의 시작과 더불어 경제대국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가시화되자 미중화해로 이를 견제하려 했다. 이와 같이 미중일 3국은 어느 한 국가가 지배적인 지위, 즉 패권주의적이 되지 못하도록 일정의 균형을 역사적으로 유지해 왔던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이 탈냉전 이후 택하고 있는 역외균형 정책의 핵심은 우호

58) Henry Kissinger, *Diplomacy*, New York : Simon & Schuster, 1994, p. 826.
59) 入江 昭, 「国家超えた日米中関係を」, 『朝日新聞』, 1996. 11. 4.

적인 국가든, 비우호적인 국가든 미국에 라이벌적인 파워 센터가 등장하는 것을 막는 데 있다. 미국은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새로운 라이벌 파워 센터로 등장하고 있는 나라로 중국을 지목해 왔다. 시카고 대학의 존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 교수는 중국과 미국의 대결을 필연시하며 "중국이 다음 몇 십년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경우 미국과 중국은 안보영역에서 치열한 경쟁을 전개할 것이며, 그것은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를 증대시킬 것"[60]이라고 내다보았다. 이러한 미중 간의 경쟁은 중일 간의 긴장과 대결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61] 이렇게 되면 중일관계의 장래는 결국 미중관계의 전개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은 일본과의 안보동맹 강화로 나타났다. 물론 일본도 중국을 동아시아 지역의 주요 군사위협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미국의 정책을 지지하고 나섰다. 2005년 2월의 '2+2'회의를 통한 미일 안보동맹 강화나 일본의 미사일 방어망 참여, 그리고 자위대의 해외 파병 등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과 일본 간의 군사협력에 다름 아니었다. 그러나 프렌치가 지적하고 있듯이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만으로 중국의 부상이 몰고 올 중일 간의 긴장과 대결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교통경찰로서의 '역외균형' 역할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62]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의 부상에 따른 중일관계의 긴장과 대립 속에서 '역외균형 파워'(offshore balancing power)로서의 미국의 역할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일본이 보는 미국의 교통경찰 역할은 좀 복잡하다. 데라시마가 지적하고 있듯이 미중무역의 총액이 미일무역의 총액을 넘어서고 있는 오늘의 미중일 관계에서 미국과 힘을 합쳐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자는 것은 일본의 일방적인 생각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게임은 미일이 연합하여 중국에 대응하는 양

60) Ikenberry, "The Rise of China and the Future of the West". 「中国の擡頭と歐美秩序の將來」, p. 271에서 재인용.
61) Johnson, "No Longer the 'Lone' Superpower : Coming to Terms with China", pp. 1~2.
62) French, "Japan and China Take A Collision Course".

자 게임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을 동시에 상대화하는 3자 게임으로 변모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63] 이러한 중국의 부상에 따른 '상대적 게임'의 전개는 전후 미국과의 '절대적' 관계에 의존해 왔던 일본의 대외인식에 일대 충격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아마도 그러한 상대적 게임에 대한 일본의 불안은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을 서로 견제시키는 미국의 '분단통치'(divide and rule)에 일본이 계속 가담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이러한 논쟁에 불을 붙인 데라시마는 미일관계에는 언제나 중국이라고 하는 요소가 개재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64] 태평양전쟁도 중국을 둘러싼 미일 간의 전쟁이었으며, 전후 미일 반공동맹도 중국의 공산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중일에 대한 작금의 상대적 게임 전개도 중국의 부상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다. 데라시마가 보기에 미국이 지금 벌이고 있는 상대적 게임은 경제대국 중국과의 우호관계 정립과 동시에 군사대국 중국에 대한 견제라고 하는 양면성을 띠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앵글로색슨에 의한 아시아 분단통치의 지속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65]

실제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있어서 최악의 사태는 중일동맹의 결성"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아시아의 내부 대립을 이용한 미국의 영향력 행사는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아마도 전후 미국에 의한 아시아 분단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른바 닉슨 쇼크로 알려진, 키신저에 의한 1971~2년 미중 국교정상화 교섭일 것이다. 마이클 샬러(Michael Shaller)의 지적처럼 미중관계 개선의 배경에는 중일동맹의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그에 의하면 닉슨은 일본의 친미노선을 평가하면서

63) 寺島実郎, 「未来に対する歴史責任」, 寺島実郎 外, 『大中華圏』, 東京 : 岩波書店, 2004, p. 33.
64) 寺島, 「未来に対する歴史責任」, pp. 169~170.
65) 寺島, 「未来に対する歴史責任」, pp. 173~4.

도 일본의 '아시아 지향, 중국 지향에 대해 염려하고 있었다'는 것이다.[66]

여기에 후일 알려진 바와 같이 키신저의 대일 불신(일본 사람들은 시기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저우언라이(周恩來)와의 국교정상화 교섭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저우언라이의 주일미군 철수 요청에 대해 키신저는 주일미군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막는 억지력으로 이른바 "병마개"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저우언라이를 설득했던 것이다. 이 국교정상화 교섭에서 키신저가 말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인은 보편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는 데 비해 일본인들은 편협하다"[67]는 표현은 작금 중국의 부상으로 다시 불거지고 있는 미국의 분단정책에 대한 일본의 불신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수상의 EAEC(동아시아경제협의체) 구상이나 일본 주도의 아시아 판 IMF 결성에 대한 미국의 견제 또한 아시아 분단정책의 대표적인 예에 속할 것이다. 미국의 유럽전략이 NATO나 OSCE(유럽안보협력기구) 등과 같은 다자적 협력 틀을 지원하는 형태로 전개된 데 반해, 아시아 전략은 양자관계의 유지를 통해 미국의 주도권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는 분단관리에 중점이 두어졌던 것이다. 따라서 양자적 관계로 분단된 아시아에서 미국이 중국과 일본을 놓고 벌이고 있는 '상대적인 게임'은 결코 새로운 현상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의 협력 하나만'을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대응책으로 삼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미국이 전개하고 있는 '상대적' 게임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아마도 일본이 미국의 이 상대적인 게임에서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은 야베 다케시(矢部武)의 표현을 빌리면 미중관계의 발전 속에 일본이 "뒤로 밀려나게 되지 않을까"(取り殘される) 하는 두려움일 것이다.[68] 즉 '일본 경시, 중국 중시'의

---

66) Michael Shaller, *Altered States :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ince the Occuation*,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春原 剛, 『ジァパン·ハンド』, 文藝春秋, 2006, pp. 148~49에서 재인용.

67) 毛利, 『日中関係 : 戦後から新時代へ』, pp. 62~64.

68) 矢部武, 「変貌するアメリカ人の対中観」, 『論座』 2006. 5, p. 162.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다. 실제로 일본의 조야는 미국이 저울질하고 나올지도 모르는 '일본이냐, 중국이냐'의 문제에 민감해지고 있다. 미중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미국에게 일본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에서 고립되고, 헬무트 전 독일총리의 지적처럼 미국 이외에 세계 어디에도 믿을 만한 친구가 없는 일본으로서는 대단한 충격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69]

물론 미국에게 있어서 중국과 일본 둘 다 무시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하지만 세계의 초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 비해 일본의 비중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사이 노부오(淺井信雄)의 표현을 빌리면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일본은 "따라 올 나라," 내지 "동조해 올 나라"이지만, 중국은 "경쟁과 협력이 운명지어진 국가"로서 "잘 조정하지 못하면 미국에 곤란한 나라"이기 때문이다.[70]

실제로 이러한 일본의 우려는 미국 부시 행정부의 여러 움직임에 의해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다. 부시 1기에는 미일관계 중시를 상징하듯 지일파 내지 친일파였던 리처드 아미티지(Richard Armitage) 국무부 부장관, 켈리(James Kelly)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 그리고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 NSC 아시아 부장 등이 외교안보팀에 포진해 있었지만, 2기에는 부시 외교팀에서 일본통은 자취를 감추었다. 이것은 9.11 테러 대책과 북한의 핵위기 등에 대해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했던 미국이 취한 중국 중시 정책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우려는, 보수 논객인 니시베 스스무(西部邁)가 지적하듯이 장기적인 미중일 간의 상대적인 3각 게임에서 일본보다 중국을 중시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합치한다고 보는 미국 내의 움직임들과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다.[71] 야베 다케시는 이러한 현상을 '일중역전 현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의 지

69) 矢部武, 「変貌するアメリカ人の対中観」, p.163.
70) 淺井信雄, 『美中が鍵を握る東アジア情勢』, 東京 : 青春出版社, 2007, p. 145.
71) 「アジアを舞台に21世紀のゲームが 始 まっている」, pp. 31~32.

적대로 2005년 3월 미국 정부, 의회, 경제계, 매스미디어 관계자 254인을 상대로 한 조사는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일본을 꼽는 사람의 비율이 전년 대비 17%나 줄어든 데 반해 중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전년 대비 14%나 늘어났던 것이다.[72] 물론 미국의 정관계 인사들은 일본을 아직 공식적으로 미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지만, "중국은 대국으로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중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73]는 미국국무성 아시아 태평양 담당자의 표현이 말해 주듯, 미국이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일본보다 중국을 중시하는 경향은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무엇보다도 민감하게 느낀 것은 일본의 정치권과 경제계였다. 정치권은 미일동맹관계의 지탱에 안전장치 역할을 해온 미일의원교류에 대한 미국 의회의원들의 관심 저하에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스노하라 쓰요시(春原剛)의 조사에 의하면 매년 10여 명 이상 참가해 오던 미국 의회의원들의 수가 2005년에는 겨우 3명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일본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여기에 참여하는 의원들 중 비중 있는 정계의 거물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사이토 구니히코(齊藤邦彦) 전 주미대사는 이러한 미일의원교류의 쇠퇴를 "우려의 씨앗"으로 표현하고 있었다.[74] 더욱이 일본의회보다 중국 전인민대표대회를 파트너로 삼으려는 미의회의 움직임에 일본 정계는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75]

미 정계에서의 일본 비중의 저하는 경제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미일관계를 경제 면에서 뒷받침해 온 미일 재계인 회의에도 비중 있는 미국의 재계 인사들이 거의 참가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일본은 충격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미국 측이 본사의 최고 경영진을 거의 파견하지 않게 되자 초조해진 일본 측은 재계

72) 『朝日新聞』, 2005. 8. 27, 석간. 矢部, 「変貌するアメリカ人の対中観」에서 재인용.
73) 矢部, 「変貌するアメリカ人の対中観」, p. 161에서 재인용.
74) 春原, 『ジャパン·ハンド』, pp. 161~62.
75) 春原, 『ジャパン·ハンド』, p. 162.

인 회의의 활성화를 위해 '중국의 참가'를 들고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미일 재계인 회의가 중국에 하이잭 당해, 원금도 이자도 못 건진다'는 우려에 의해 곧 취소되는 해프닝을 겪기도 했던 것이다.[76]

미중일 관계에서 미국이 중국과 일본을 어떤 비중으로 다루느냐는 정권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여 왔다. 예컨대 키신저 류의 공화당 세력균형파와 민주당의 관여정책파로 대별되고 있기는 하지만 두 파 모두 미중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미국의 국가이익에 합치한다는 데는 차이가 없어 보인다. 물론 부시 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권력의 중심부를 장악한 네오콘 그룹이 키신저 류의 세력균형 정책을 "원칙도 없는 실리우선주의"라고 비난하며 대중 강경책을 들고 나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일본인들의 눈에 미국의 대중국 중시 경향은 막을 수 없는 대세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마도 이러한 일본의 불안에 결정타를 날린 것은 로버트 졸릭(Robert Zoellick) 국무부 장관의 "책임있는 이해공유자"(responsible stakeholder) 발언이었을 것이다. 2005년 9월 21일 뉴욕에서 있은 '미중관계 전국위원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중국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는 냉전시대의 봉쇄정책이나 세력균형정책과 같은 구식 모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은 서로 너무나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며 중국에게 "책임있는 이해공유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나섰던 것이다.[77] 사실 그동안 지일파로 알려졌던 졸릭이 대일 강경파로 돌변한 듯한 자세는 다른 곳에서도 이미 감지되고 있었다. 2005년 8월 24일자 일본판 『뉴스위크』는 "중국은 과거의 '일본 주식회사'와 달리 수출을 할 뿐만 아니라 수입도 하고 있다. 물건을 내다 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도 하며 외국기업에 문호도 개방하고 있다"는 졸릭의 발언을

76) 春原, 『ジャパン·ハンド』, pp. 162~63.

77) Rober Zoellick, "Whither China : From Membership to Responsibility?", *Remarks to National Committee on U.S.-China Relations*, September 21, 2005, p. 2.

소개하며 이것이 향후 미국의 대중, 대일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았던 것이다.[78]

이렇게 '책임있는 이해공유자'로서의 미중관계가 진전되는 것과는 달리 중일관계에서는 72년 체제와 78년 체제에 의해 성립된 원칙과 절차가 붕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중관계의 심화에 따라 미일관계의 중요성은 떨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야베의 지적처럼 일본은 이제 이러한 미중 중심의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구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심각히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 있는지도 모른다.

5. 결어 _ 중일 '신시대를 향한' 일본의 전략 — 동아시아 공동체(?)

이상의 논의에서 보아 왔듯이 중일 간의 갈등과 긴장은 흔히들 얘기하는 역사 문제의 차원을 넘어선 파워의 전이(power shift)의 문제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파워 전이의 중심에는 중국의 부상이 있다. 이러한 중국과 이에 대응하는 일본 간의 파워게임이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변동을 불러 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일본의 최대 전략과제는 어떻게 중국과의 관계를 재구축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일본의 최대 전략과제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평화와 안정의 환경을 만들어 내는 일이다. 다른 말로 하면 중국과 경제공동체의 운명을 향유하면서, 동시에 중국이 군사적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새로운 관계의 구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다나카 히토시(田中均)의 지적처럼 중국과의 공통 이익에 착목한 '양국관계의 심화'인 동시에 중국을 건설적인 파트너

78) 矢部, 「変貌するアメリカ人の対中観」, p. 162.

로 담보할 수 있는 '지역협력체제의 구축'에 다름 아닐 것이다.[79]

지역협력체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고지마 도모유키가 주장하고 있듯이 지금 중일 간의 문제가 동아시아, '중·중 관계 속의 중일관계', 그리고 '일·일 관계 속의 일중관계'라고 하는 3층 구조에서 동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금 급격한 경제성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반일감정을 이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중국악자론'을 자민당에 대한 민주당의 도전을 억제하는 데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반일감정은 95년부터 강력히 추진된 애국주의 교육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공산당의 정통성을 항일애국전쟁에서 찾고 있는 중국에서 국내 불안 해소책으로서의 반일카드는 쉽게 버리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반면 일본에서는 '중국악자론'보다 국민여론을 동원하기 쉬운 정치적 자산은 없다. 대만의 안보에 대한 개입의사표시나 가스전 개발을 둘러싼 영토 분쟁 등을 이용한 반중감정은 보수 집권세력에게 더 없는 정치적 자산이다. 이렇게 누적되어 가는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국내정치의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움직임을 방치할 경우 중일 간에는 통제가 불가능한 적대감의 파도가 몰려올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두 나라의 협력을 통한 동아시아의 경제와 안전보장에 필요불가결한 지역협력체제의 구축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80]

그러나 불행하게도 동아시아에는 파워의 전이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이해의 충돌을 중재할 수 있는 다자적 지역협력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분명 경제적으로 통합되어 가고 있으면서도 정치·안보적으로 갈등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세력재편과정에서 지역협력체야말로 역사, 안보, 경제 문제 등을 총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강력한 메커니즘이 될 것이다. 특히 일본의 입장에서는 부상하는 중국의 경제

79) 田中均, 『外交の力』, 日本経済新聞出版社, 2009, pp. 192~93.
80) 小島朋之, 「三層構造から理解する新たな日中関係」, 『論座』 2005년 8월, pp. 30~37.

지배 내지 군사적 위협을 우려하는 ASEAN 국가들과 더불어 중국을 견제하고 변화시키는 데 더없이 좋은 기구가 다름 아닌 지역협력기구인 것이다. ASEAN 국가들은 지역경제에 대한 화교계 자본의 지배나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국을 다자적 교섭에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러한 ASEAN의 노력에 호응하여 중국은 ASEAN+3(한중일) 회의체에 의욕적으로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남아 우호협력조약(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TAC)에 재빨리 서명하고 ASEAN 국가들과의 FTA협정 체결 등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2000년 ASEAN 정상회의에서 주룽지(朱鎔基) 수상이 '중국 ASEAN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제안했을 때만 해도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나라는 없었다. 하지만 중국이 2002년 11월의 ASEAN 정상회의에서 '중국 ASEAN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포함한 '포괄적 경제협력 계획'에 서명하는 등 경제공동체 형성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나서자 일본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아마코 사토시(天兒慧)가 주장하듯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 대한 일본의 최대 과제는 ASEAN과 ASEAN+3에서 고조되고 있는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에 중국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81] 어떻게 보면 이것이야말로 데라시마가 얘기하듯 미국의 아시아 분단통치의 속박에서 벗어나 아시아에서 주체적으로 상호신뢰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일본의 대안적 외교 전략인지도 모른다.[82]

하지만 불행하게도 일본에는 이러한 동아시아의 지역협력 내지 통합에 대한 외교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미일동맹의 기초 위에서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동아시아공동체'에 어떻게 관여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일본도 2002년 11월 싱가포르와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FTA보다 폭이 넓은 경제통합 형태)를 체결하고 한국과 EPA교섭을 시작하는 등 다자적

81) 天兒慧, 「変化する中国人の対日感情 新しい関係を切り開く好機」, 『論座』, 2004. 10, pp. 70~71.
82) 寺島, 「未來に対する歷史責任」, p. 174.

무역주의에서 지역적 무역주의로의 방향전환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또 비록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중국이 가맹하자 뒤따라 가맹하기는 했지만 2003년에는 동남아 우호협력조약(TAC)에 가입하면서 아시아 지역 외교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2002년 1월 고이즈미 수상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된 일본의 '동아시아 커뮤니티(an East Asian community) 구상'은 관사 an과 community의 c가 소문자로 처리된 데서 알 수 있듯이 특정의 커뮤니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83] 다니구치 마코토의 지적대로 사실 이러한 구상 자체가 중국에 대항하여 대증요법적으로 제시된 것이었기 때문에 커뮤니티 구성국의 범위, 성격, 방향, 그리고 구체적인 프로젝트 등이 명확하지 않은 막연한 것이었다. 즉 일본은 동아시아 커뮤니티의 범위를 ASEAN+3에 한정하지 않고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를 포함한 보다 열린,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미국의 참여가 가능한 막연한 공동체 구상을 내놓았던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공동체 구상은 ASEAN과 중국, 그리고 한국이 구상하고 있는 공동체와 거리가 먼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통합을 전제로 한 공동체'의 비전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84]

물론 동아시아공동체는 아직 하나의 이상일 뿐 로드맵이 없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다름 아닌 이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주도적 역할을 할 미중일 간의 이해 갈등으로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공동체의 성격과 범위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입장 차이는 로드맵을 만드는 데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과제이다. 미국의 헤게모니를 제어할 유용한 방법으로 동아시아공동체를 바라보는 중국에 대해,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틀 속에서 경제적 협력체로서만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동아시아공동체가 부상하는 중국지배권 하에 들어가지 않을

83) 谷口誠, 『東アジア共同体』, 東京 : 岩波書店, 2004, pp. 34~35. 일본 외무성은 '동아시아공동체'가 아니라 '동아시아 커뮤니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84) 谷口誠, 『東アジア共同体』, p. 124.

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며 ASEAN 및 한국 등 여타 국가들과 개별적인 협조관계의 강화에 몰두하고 있는 일본이 동아시아공동체 수립에 적극적인 중국과 손을 잡을 가능성은 반중감정이 국내정치적 자산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오히려 점점 희박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두 나라 간의 라이벌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일본이 직면한 지정학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는 더욱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아무런 다자적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던 유럽에서 갈등을 치유하고 분쟁을 해결한 공동체를 만들어 냈듯이 일본과 중국은 지금 동아시아공동체 실현을 위한 공동의 협력관계를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서구적 근대화를 달성한 후 '아시아의 일원'이면서 아시아의 일원이기를 거부했던 일본이 지금 중국의 부상으로 다시 직면하게 된 '서구냐 아시아냐'의 선택에 대한 압력에 어떠한 비전으로 대응할지 분명하지가 않다.